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등 〉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91호)

2024.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폐지	3
2. 영화 상영 자격 제한 일시적 완화	17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2024. 10. 7.

다. 회 부 일: 2024. 10.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Ⅲ. 검토의견

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략)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5. (생략)	제24조(기금의 조성) ----- -----. 1.·2. (현행과 같음) <삭제>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4.·5. (현행과 같음) <삭제>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
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
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
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
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
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
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
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
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
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
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
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
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
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

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 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⑥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 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u>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u> <u>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u>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u>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u>	법률 제82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2857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9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u><삭 제></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5조의2¹⁾에 따르면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이하 ‘영화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음. 이는 국내 영화산업의 지원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7년 도입된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²⁾으로, 현재는 영화상영관 입장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전 연도에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한 영화상영관
 2. 직전 연도의 입장권 판매액(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말하며, 직전 연도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입장권 판매액을 연간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영화상영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의 월 판매액이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영업기간이 3개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업기간 동안)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2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영화상영관별 입장권 판매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영업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의 입장권 판매액을 월 판매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달의 영업일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발생 직전 연도까지 영업기간 동안의 월평균 입장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⑥부과금·가산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및 부과금 수납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고 있으며,³⁾ 영화발전기금⁴⁾을 조성⁵⁾하고 운용⁶⁾함에 있어 필수적인 재원으로서는 기능하고 있음.

-
-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 금액은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5에서 같다)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최근 3년간 영화발전기금 결산 및 2024년도 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계획
수 입	○ 정부출자수입	-	168	-	-
	○ 기타재산이자수입	1,754	825	2,259	3,737
	○ 가산금	2	6	12	14
	○ 법정부담금	17,086	17,948	26,255	29,442
	○ 기타경상이전수입	1,414	3,201	722	2,027
	○ 기타잡수입	468	286	468	3,229
	○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05,181	60,533	57,342	63,946
	○ 일반회계 및 기금 전입금	-	-	80,000	35,400
	○ 공자기금 예탁금 회수	76,178	-	-	-
	○ 공자기금 예수금	-	80,000	-	-
□ 기금운용 총계		202,083	162,967	167,057	137,795
지 출	○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129,695	91,611	69,572	46,677
	- 영화제작 지원	46,424	45,854	25,151	10,725
	- 영화유통 지원	34,578	19,137	19,721	15,798
	- 영화정책 지원	37,094	16,644	15,495	17,411
	- 첨단영화기술 육성	4,257	3,192	2,573	-
	- 영화기획개발 지원	5,190	4,885	4,757	-
	- 영화영상 로케이션 지원	-	-	-	1,024
	-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2,152	1,899	1,875	1,719
	○ 기금 운영비	11,715	11,973	12,006	12,289
	○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	-	1,022	80,977	-
	○ 금융기관 예치금	60,673	58,360	4,502	78,829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 재구성

영화발전기금은 영화부과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우리 영화의 제작·유통 및 해외수출 등을 지원해왔는바, 그 순기능이 인정됨에 따라 최초 2014년 말까지였던 영화부과금의 징수기한은 2021년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고, 2021년 말에는 그 기한이 다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음.⁷⁾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영화관 입장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2019년까지 500억원 내외 규모로 유지되었던 영화부과금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영화관 입장권 연간 매출액 및 부과금 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1,913,996	510,375	588,489	1,160,212	1,261,410
부과금 수입	54,582	10,522	17,086	17,948	26,255

* 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상영권 부과금 납부연장 실시를 통해 2020년 2월~10월 발생한 부과금을 2021년 6월까지 납부유예 조치한 바 있음.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개정안은 정부가 최근 각종 법정부담금이 이른바 ‘그림자 조세’에 해당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축소하는 방안⁸⁾을 발표하면서 영화부과금을 함께 폐지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찬성 및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영화부과금 폐지 찬성의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영화부과금은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의 성격으로, 영화관을 찾는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⁹⁾ 영화 부과금은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0호, 2007. 1. 26.>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 12. 23., 2021. 12. 28.>

8)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2024. 3. 27. 정비 대상 부담금 목록은 [참고1] 자료 참조

9)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2024. 3. 27. 보도자료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인 ‘부담금’의 일종으로, 이는 이른바 ‘준조세(準租稅)’에 해당함에도 영화관람객 대부분은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화관 입장권 금액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지출의 발생으로 관람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임.

둘째, 부담금은 그 부과 목적인 특수한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집단에게만 부과되어야 하나, 영화관람객은 역사적·사회적·법적으로 동질성 있는 특정 집단에 해당하지 않음.¹⁰⁾ 또한, 영화산업의 진흥에 직접적 근접성 및 책임성과 효용성이 인정되는 집단은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화관람객을 책임 있는 집단으로 선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며, 따라서 이들에게 집단적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움.¹¹⁾

셋째, 영화부과금이 폐지되더라도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¹²⁾ 현재도 영화발전기금 수입에서 영화부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하며,¹³⁾ 일반 회계나 국민체육진흥기금¹⁴⁾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영화산업을

10)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7헌마860 중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11) 정부도 2024. 3. 27.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영화산업 등의 진흥에 대한 영화관람객의 책임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음.

12)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부터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 2024. 3. 27. 보도자료

13)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금수입 전체 대비 15.7%, 2024년도 계획 기준 21.4%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하고 있는바, 정부는 영화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부과금 폐지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진흥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임.¹⁵⁾

반면, 영화부과금 폐지 반대의견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영화부과금을 폐지할 경우 일반 국민의 부담 완화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영화상영관 측의 부담만을 완화해주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음.¹⁶⁾

영화부과금 폐지에 대하여 일반 관람객들은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인 영화부과금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500원¹⁷⁾ 정도를 인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¹⁸⁾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계없이 영화산업 진흥사업은 차질없이 지원합니다”, 2024. 4. 4. 보도설명자료

16) 노컷뉴스, “‘부담금 정비 혜택’ 대기업은 풍성, 일반 국민은 찢끔”, 2024. 3. 28.

17)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인 영화부과금은 입장권 가격이 1만 5,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450원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업계에서는 각종 할인 등을 고려해 약 300원으로 추산함. 연합뉴스, “1만5천원 내고 영화 보면 437원은 부담금…영화발전기금에 사용”, 2024. 1. 16. 기사 참조

18) 한국일보, “관객은 “애개개” 영화계는 “애간장”... 환영 못 받는 영화표 500원 인하”, 2024. 4. 2.

한편, 현재 법률상으로는 영화부과금을 ‘영화상영관 입장객’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입장객이 영화부과금이 포함된 입장권 가격을 영화상영관에 지불하고 이를 수납한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진흥위원회에 해당 부과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음. 즉, 영화상영관이 가격을 책정하여 관객들로부터 받은 입장료의 총 수입액을 두고, 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상 ‘각 영화상영관이 영화발전기금에 납부’하고 있는 것인바, 그에 따라 영화부과금 폐지의 효과가 영화관람객이 아니라 영화상영관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¹⁹⁾

더욱이, 현재 영화상영관 업계는 최근의 물가 상승률과 각종 부대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영화부과금을 폐지하더라도 영화 관람료를 현재 수준²⁰⁾보다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²¹⁾ 이처럼 영화부과금의 폐지가 영화관람객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지적은 현실이 될 가능성도 큼.

둘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영화부과금의 위헌 확인을 청구한 사건²²⁾에서 영화부과금이 영화관람객의 재산권 및 영화관 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19) 한겨레, “건설사·대기업 수천억 ‘뭉텅’ 깎아준 부담금…국민 체감은 몇천원”, 2024. 3. 28.

20) 참고로, 현재 영화관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티켓 가격(성인, 2D 영화 기준)은 평일 1만 4,000원, 주말 1만 5,00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

21) 뉴스토마토, “영발기금 부과 폐지해도…상영업계 “관람료 인하 없다” 반발”, 2024. 4. 1.

22)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7헌마860(위헌 5인 및 기각 4인으로, 위헌심판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기각결정)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문을 통해 영화관람객은 ‘영화’라는 단일 장르의 예술의 향유자로서 집단적 동질성이 있고, 영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객관적 근접성이 있으며, 영화발전기금의 지출 용도는 영화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그 기금의 집행을 통한 궁극적인 이익은 영화산업의 소비자인 관람객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집단적 책임성 및 효용성도 인정되므로 영화예술의 진흥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하여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집단인바, 이들을 부과금의 납부의무자로 정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²³⁾ 위헌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음.

셋째, 다른 재원의 확보 없이 영화부과금만을 폐지할 경우 기금의 주요 재원이 사라져 기금 고갈의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되고, 나아가 기금 자체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코로나-19 및 OTT 플랫폼 등장 등 산업환경의 변화로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영화 관련 단체들은 “기금의 유일한 재원이었던 영화부과금 폐지를 영화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음.²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부과금이 폐지되더라도 영화발전기금은 그대로 존치하고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해 영화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나, 지난 2021년 영화부과금의 징수

23)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7헌마860 중 재판관 4인의 기각의견

24)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 성명, 2024. 4. 4.

기한을 종전 2021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법률안²⁵⁾을 심사할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영화부과금의 징수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영화발전기금이 근시일 내에 고갈되어 영화산업 진흥 및 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²⁶⁾

나아가 영화발전기금에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금 신설 관련 기준²⁷⁾을 적용한다면, 영화부과금을 폐지할 경우 영화발전기금의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던 부담금 등의 재원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어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기금수입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불확실하여²⁸⁾ 같은 항 제3호의 기준 또한 충족하기 어려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1.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790호(2021. 12. 2. 대안반영폐기)

26) 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21.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6790호)에 대한 검토의견, 2021.

27)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28) 기금의 수입을 일반회계에 의존할 경우 기금운용의 독립성에 제약이 발생하여 별도의 기금을 설치한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안 편성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전출금 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음.

우므로, 영화발전기금 자체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종합하면, 영화부과금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영화부과금이 관람객들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고 있고 이를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민생부담 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영화관람객에게 영화산업의 진흥이라는 공적 과제에 대한 집단적 책임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화부과금 없이도 영화발전기금의 조성 및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²⁹⁾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영화부과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법률안(의안번호 제2202284호) 및 개정안과 달리 영화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제2200403호)과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의안번호 제2200959호)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29)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참고2] 및 [참고3] 자료 참조

2. 영화 상영 자격 제한 일시적 완화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그 자격 제한을 2027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u>취득한</u>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영사 자격자) ----- ----- ----- <u>취득하거나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u> ----- ----- -----.

※ 안 부칙 제3조(유효기간)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4조에 따르면 일부 소형영화 등³⁰⁾이 아닌 한 영화의

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 카메라로 제작한 영화
2. 1920×1080픽셀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한 영화

상영은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음.
그에 따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영사산업기사’
및 ‘영사기능사’ 자격시험을 거쳐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필기시험				실기시험				자격 취득자 현황
		접수	응시	합격	합격률	접수	응시	합격	합격률	
영사 산업 기사	소계	1,228	962	190	19.8	259	248	100	40.3	1,060
	~2018	1,160	920	179	19.5	250	239	95	39.7	1,055
	2019	25	16	5	31.3	5	5	3	60.0	3
	2020	18	13	2	15.4	1	1	0	0.0	0
	2021	9	4	2	50.0	1	1	1	100.0	1
	2022	9	5	0	0.0	0	0	0	0.0	0
	2023	7	4	2	50.0	2	2	1	50.0	1
영사 기능사	소계	20,545	18,386	6,213	33.8	9,838	9,375	3,436	36.7	3,694
	~2018	18,545	16,785	5,444	32.4	8,830	8,420	3,013	35.8	3,271
	2019	820	777	277	35.6	433	425	150	35.3	150
	2020	570	326	171	52.5	207	207	129	62.3	129
	2021	181	155	116	74.8	128	113	54	47.8	54
	2022	156	108	72	66.7	97	87	54	62.1	54
	2023	273	235	133	56.6	143	123	36	29.3	36

* 자료: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 2024. 6.

그러나 오늘날 영화상영관에서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디지털 형식(DCP, Digital Cinema Package)으로
바뀌게 되면서, 과거와 같이 영화 상영에 있어 전문적인 자격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자격 제한이 영세·소규모 영화상영
관의 인력 운영 부담만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영사기능사 등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사 분야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그 자격 제한을 2027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소규모 영화관의 영화상영 인력 수급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아울러 정부도 최근 영화 상영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2026년~2027년) 완화하고 그 운영 경과에 따라 제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³¹⁾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영화 상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영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의 신뢰 또한 일정 부분 보호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아직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2025년도 상반기 중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 인바, 현재 2025년 1월 1일로 명시하고 있는 안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연장함으로써 개정법의 실제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문 의 처
02)6788-5376

31)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2024. 7. 10. 관련 세부내용은 [참고4] 자료 참조

참고1

정부 발표 부담금 정비 대상 및 규모

既往비 부담금 4개	+	금번 정비안(32개)			=	정비 부담금 36개
		폐지	감면	경감 규모		
		18개	14개	2.0조원		

□ (정비대상) 91개 부담금 중 총 32개

* 既往비(1.16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추진 중인 4개 부담금 포함시 36개

부처	폐지(18개)	감면(14개)
기재부	■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교육부	■ 학교용지부담금	-
외교부	■ 출국납부금	■ 국제교류기여금
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	-
문체부	■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 ■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 출국납부금
산업부	■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농식품부	-	■ 농지보전부담금
환경부	■ 수질개선부담금 ■ 수익자부담금(댐건설법)	■ 폐기물부담금 ■ 환경개선부담금 ■ 폐기물처분부담금
고용부	-	■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토부	■ 원인자부담금 ■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 시설부담금(산업단지) ■ 시설부담금(물류단지)	■ 개발부담금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해수부	■ 수산자원조성금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 방제부담금
산림청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 (경감규모) 연간 2.0조원 수준(폐지 △0.5조원, 감면 △1.5조원)

* 32개 정비대상 부담금 '24년(계획) 9.6조원 대비 21% 수준

○ 1년간 한시 감면: 개발부담금(△3,082억원), 석유수입부과금(△1,516억원)

○ 단계적 감면 확대: 전력기금 부담금(1년차 △4,328 → 2년차 △8,656억원)

참고2

정부 제출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부과금 징수 규정 폐지로 인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액이 5개년 간 약 1,50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구 분 \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부과금 징수액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예상징수액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30,190
총 비용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30,190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부과금 징수 제도 폐지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수입 감소 예상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25조의2(부과금의 징수)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4년 이후 전년대비 영화관 관객수 매년 1.5% 수준 상승 기준으로 수입 예측
- 영화관 입장권 가격은 24년 기준 유지됨을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 24년 예상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 총액인 28,865억원에서 매년 1.5% 상승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 25~' 29년 간 150,952백만원의 징수금 감소가 예상됨
 - * 코로나 이전 시기인 '17~'19년 연평균 관객수 증가율 1.5%로 계산
- 5개년 이후인 ' 30년 이후로도 매년 약 1.5% 증가한 금액의 징수금이 감소되는 양상이 예측됨

IV. 부대의견

- 해당 없음

참고3

정부 제출 개정안 관련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정부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조달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회계·기금 간 전입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합 계>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재원조달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중앙정부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 일반회계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합 계>	29,298	29,738	30,184	30,636	31,096	150,952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부담금 폐지에 따른 수입감소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
- ※ 항목별 규모는 유동적이며, 정부안 확정시기에 맞춰 변동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 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Ⅳ.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2024년 중	기획재정부	영화발전기금 주요재원을 정부내부거래로 재원조달하되, 전입금 규모는 차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시기에 맞춰 규모 확정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中 ‘영화 상영 자격’ 관련 내용 발췌

Ⅱ. 분야별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2. 현장규제 개선

2. 중소/소상공인 애로 [6건]

- ②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26~’27년 한시운영)하고*, 운영경과에 따라 제도화 등 검토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25.上) → 교육 수료자는 상영업무 시범 수행 가능(‘26~’27년)

[조치계획] ① (문체부) 「영화비디오법」 개정 추진(‘24.下)

② (문체부) 영화관 영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25.上) 및 교육 이수(‘25.下)

- ▶ (규제현황)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만 가능
- ▶ (기대효과)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화 등 영화관 인력부담 완화

현장건의 현행법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90년대 중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한데도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